

한국대학, UR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UR에 대비한 한국 대학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언

최 갑 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1. 서 론

최 근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협상에 교육서비스와 교육기자재를 포괄하는 교육개방의 문제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특히 정부가 UR협상의 결과와 관계 없이 교육부문을 1996년부터 부분개방하고 2000년까지 완전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이후, 각 대학은 UR의 파고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의 수립에 부심하고 있으며 발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실상 대학입학의 학령인구가 1996년부터 감소하여 2002년 이후 고등교육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많은 대학들에게 UR개방은 그야말로 생존의 시험무대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근자에 교육개방에 대비하여 제기된 일련의 개혁방안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개혁안을 제시한 이들의 고민이나

진지함을 한껏 느끼면서도 필자에게는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심지어 그러한 개혁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자못 의심스럽다. 우선 현행 대학교육의 문제점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개혁안이 단순히 나열식에 불과하여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과 기술적인 수준의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된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요법적인 처방만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요, 근본적인 요인과 부차적인 요인을 무차별적으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과연 누구를 위해 누가 개혁하느냐 하는 개혁의 주체와 수혜층에 대한 관점을 대부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의 내용과 주체, 개혁의 과정과 결과는 결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개혁안을 제시할 때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개혁의 주체가 과연 개혁을 추진할 만한 의지와 자질이 있는

지 따져보아야 하며, 개혁안이 의식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은연중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입장에 봉사하는지도 가려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제까지의 논의와는 다른 방식을 취할까 한다.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제기하고자 하며(3장), 이를 위해 요청되는 발상의 대전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2장). 마지막으로 개혁의 주제에 관한 역동적인 시각을 개진하고자 한다(4장).

2.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

그간 우리의 대학은 산업화에 필요한 고급 인적 자원의 거의 유일한 배출처로서 한국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행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권은 대학의 문제를 국가경영의 수준이 아니라 정권수호의 차원에서 보았으며, 사립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불건정이라고 할 족벌체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카데미즘의 본산이어야 할 대학에 비리와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조정자이자 감독자여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그 비리를 제상산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파행구조가 해방 이후의 우리의 대학사에서 거의 항상적인 조건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맞물려 그러한 파행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 대학의 양적 팽창을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즉, 그간의 파행구조가 그야말로 無에서 有를 만들어내야 하는 황무지와 같

았던 열악한 여건의 산물로서 역사적으로 일정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것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의 수준을 더 이상 향상시킬 수 없다는 시대적 요청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UR의 협상에 따른 교육의 개방이 시련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아울러 우리의 대학에게 그간에 축적된 일정한 수준의 역사적 성과의 바탕 위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도약이란 그야말로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인 전환을 뜻하는 만큼 기존의 사고틀을 깨는 발상의 대전환을 요청한다. 양적인 팽창이 질적 전환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며 새 술은 새 부대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할 때 요청되는 문제제기의 새로운 틀이란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총체적 사고를 요청한다. 여기에서 총체적 사고란 대학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차원을 갖는다. ① 교육이란 직접적으로 문화적 헤게모니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적인 장치로서 전체 사회와 긴밀히 관련된다. 분석을 위해 교육부문을 고립시켜 파악할 수는 있지만 교육의 문제는 사회와의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결코 교육학자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운위하는 소이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논의구조가 지극히 파인 전문적이고 비공개적이었음을 반성하기 위함이다. ② 대학교육 역시 교육 전반의 틀, 특히 초·중등 교육과 밀접히 연관시켜 파악되어야 한다. 양자가 유기적 관계에 있음은 단지 양자의 교육과정의 입시를 통해 계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재생산구조의 구축을 위해 양자가 적극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이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보다 유기

적인 접근방식을 요청할 것이다. ③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서 분석이나 고려의 단위가 특정 대학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공립과 사립을 아울러 대학사회 전반에 이르러야 한다. 대학의 특성이나 대학간의 다양성 또는 역할분담은 전체 대학사회라는 준거집단을 상정할 때만이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듯 총체적 사고란 궁극적으로 교육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결부시킬 것을 요청한다. 하나의 학문체계로서 교육학은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 역시 그 이론이 배태된 사회의 맥락과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자각하는 한편 우리의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이론형성에 진력해야 한다.

둘째, UR과 관련하여 '교육경쟁력'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 교육경쟁력이란 말 그대로 우리 대학의 교육서비스의 질이 국제적인 수준을 담보하여 UR에 따른 개방의 물결 속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유학생이 들어오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진출도 꾀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널리 퍼져있는 사고방식은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으로의 해외유학을 통해 선진한 학문을 습득하여 우리 대학에 이식하는 것을 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으로 보며, 특히 최근에는 언어교육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화' 논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우리 대학사를 놓고 볼 때, 해외유학이 교수의 자질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음은 사실이며, 영어가 세계어로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는 현상에서 국제화의 논리를 반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른바 학문적 선진국들의 경험은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학문의 자생적 기반의 구축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여기에서 학문의 자생성이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학문적 성향을 말함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양성을 담아내고 그것

을 축적할 수 있는 그릇에 비유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제국의 대학들은 특히 외국학과 같이 현지에서 자료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필수적인 의무로 부과하며 해외의 정보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얻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대학원을 핵심으로 하는 자생적인 축적의 장치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정보체계를 만들어 내며, 그것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보는 다소간의 일관된 학문체계를 형성한다. 학문적 선진국이란 바로 이러한 체계를 자생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간 우리의 대학은 자생적인 축적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물론 학문분야에 따라 편차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학문의 대외의존성은 오히려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문의 자생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유학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교수에게 국내 대학은 자신의 학문의 소모처에 불과할 뿐 그는 "재충전을 위해" 해외로의 연수를 거듭해야 한다.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야말로 학문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교육의 경쟁력을 바로 세우고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렇듯 교육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몇 가지 성찰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①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문의 자생적인 축적기반의 조성이다. ② 대학의 학부가 교육의 장소라면 학문연구의 중심은 대학원인 바, 양자는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③ 학문의 자생적 기반의 조성은 어느 한 대학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의 뒷받침을 요청하며,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부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의 역할분담은 불가피하다. ④ 연구중심대학이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가장 중요한 자기임무로 갖는다.

셋째,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근본적인 시각이 요청된다.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방

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연구자는 ‘교육개방에 따른 대학교육의 개혁’의 방안으로 9가지를 제시한다. ① 대학경영의 효율화, ② 학사운영체제의 효율화, ③ 교과과정의 다양화와 교수방법의 개발, ④ 대학재정의 확보, ⑤ 대학구성원들의 개방적 태도, ⑥ 개방화된 대학체제, ⑦ UR 교육개방에 대한 정부와 사회차원의 대비 - 교육구조의 조정·제도정비·전문가 pool제 운용 등, ⑧ 대학간의 ‘교육개방 pool제’, ⑨ 교육소비자 감시체제의 정착.¹⁾ 이외에도 개혁방안의 항목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겠으나 기존의 대학교육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대충 열거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필자에게 위의 개혁안이 과연 진정한 개혁안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개혁의 주체인 교육부나 사립대학당국이 현재 과연 개혁을 추진할 만한 의지와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여러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방안의 시급함이나 중요성에 따라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흥미로운 것은 위의 연구자가 여러 방안을 나열하는 가운데 대학재정의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빈곤을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개방이 가져온 충격은 배제할 길이 없다.”(63쪽-강조는 필자의 것임). 이는 위의 연구자가 위에 열거된 여러 요인 가운데 대학재정, 더 나아가 교육재정의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임을 명확하게 인식했음을 말한다.

그렇다. 교육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훌륭한 방안도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여타의 방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이 없는 한 위의 방안들이 교육경쟁력의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는 뜻이다. 교육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학문의 자생적인 기반의 구축에 있다면, 그 구축의 유일한 방안은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확충에 있다.

넷째,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의 주체에 관한 역동적인 시각이 요청된다. 대학교육의 두 주체는 교수와 학생이지만, 교육재정의 문제를 담당할 주체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부의 직·간접적 감독을 받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다. 과연 이들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만한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을까?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개혁의 진정한 주체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학교육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함께 아우르는 ‘교육민주화운동’의 당위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3. 학문의 자생적 축적기반의 구축방안

앞서 보았듯이 우리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문의 자생적인 축적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학문의 자생적인 기반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재생산 자체가 아니라 ‘확대’재생산의 여부이다. 학문의 세계도 마치 자본주의 세계질서가 그렇듯이 확대재생산의 능력이 있을 때만 계속적인 자기발전이 가능하다.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해 단순재생산의 수준에 머문다면 확대재생산의 학문세계에 대한

1) 李鉉濤, “교육개방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개혁방안”, 『UR협상의 영향과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 전략』 (1994. 4. 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제94-2-44호, pp. 62~65.

중속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 대학의 학문의 현주소이다. 학문이 단순재생산의 수준에 머물 경우, 대학은 연구가 아니라 기껏해야 교육의 장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학의 중심은 확고하게 '학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이 학문을 확대재생산 하려면 '대학원'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석사과정은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초과정이자 수습기간이며 박사과정이야말로 확대재생산의 담당자이다. 학부의 교육과정에서 단순재생산의 매개자인 교수는 대학원을 통해 확대재생산에 참여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학부에서 단순재생산의 수준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학원의 정립은 학부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이다. 물론 이 과정, 즉 학부와 대학원의 유기적 결합이 교수 일개인을 통해 일어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 결합의 기본적인 단위는 일정한 수준에서 확대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일정한 규모의 학문세계이다.

바로 이러한 학문세계의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가의 기본요건 가운데 하나이며 UR개방체제의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주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이다.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가꾸는 과업이야말로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 학문세계의 핵심장치인 대학원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원의 주체는 교수와 학생인 바,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확보하는 길이 으뜸가는 방책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여기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우선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정보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서관'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정보와 데이터의 현실 적응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실험실과 기자재가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생의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장학금과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핵심적인 세 가지 장치를 제외한다면 심지어 연구비를 포함하는

여타의 사항은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엄청난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재정수요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시장의 규모가 엄청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선진국들도 학문세계의 물적 기반을 시장경제의 논리에 내맡기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예산 자체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자세한 통계자료를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겠다. 다만 강조코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교육예산을 1998년까지 GN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현 정권의 공약이 지켜지고(1993년도 현재 GNP 대비 3.81%) 그 가운데 위에서 말한 대학원의 세 가지 핵심적인 장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등교육예산의 몫이 커져야 한다는 점이다(현재 대학배분율이 9%에 불과하나 적어도 15%까지 높아져야 한다). ②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1991년도 현재 0.74%에서 10%수준으로). 우리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재단의 재정적 공헌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의 지원은 사립대학의 재정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재단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육성에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대학원을 육성할 수는 없으며, 전국을 하나로 묶는 학문세계의 기본단위를 고려할 때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역할분담은 불가피하다. ④ 전세계에서 출간된 단행본과 잡지를 전부 수집하는 도서관을 꾸리려면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학도서관을 갖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경우 도서관에 드는 총비용은 1993년도 현재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50억 원 정도이다(도서 및 잡지 구입비 100억 원+운영비 150억 원). 우리의 경우 이전에 출간된 도서까지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매년 500억 원 정도가 도서관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규모

를 고려할 때 모든 대학이 이런 수준의 도서관을 꾸릴 수는 없으며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을 확대하거나 아예 대전쯤에 새로운 도서관을 세울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비용은 학문의 자생적인 기반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볼 때 오히려 전국에 2~3개의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서관을 제대로 꾸리자면 도서구입비와 운영비의 적정비율이 1:1.5임을 선진제국의 예가 명확하게 보여준다. ⑤ 실험이란 이학부나 공학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히 외국학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경우 현지조사 역시 실험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생활급에 해당하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의 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대학원 자체가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학부의 설치기준에 사실상의존하고 있는 셈이며, 그리하여 교수 1인당 학생수에서 대학원생의 수가 포함되기는커녕 아예 고려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간 교육부에 대학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야 대학정책실 산하에 담당관이 신설되었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도서관의 사정이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현황의 문제는 사실상 너무도 비참하여 도무지 그것이 그간 문제시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조건을 놓고 볼 때, 우리의 대학, 특히 학부과정에서 그간 보여준 성장은 차라리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금의 국내외적 상황이 그러한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그리 길지 않은 시일 안에 학문의 자생적인 기반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문화적인 종속이 심화됨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의 자존이나 심지어 문명

사적 생존권마저 상실할 것이다. 다행스런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그간에 이룩한 경제적 성과로 말미암아 자생적인 학문기반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 대학이 소모적인 단순재생산의 악순환을 닫고 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할 기로에 서 있듯이, 우리 경제 역시 이제까지 '천민'자본주의의 기반 위에서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걸맞은 질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질적인 전환에서 독자적인 학문세계의 구축이야말로 핵심적인 사안인 것이다.

4. 대학교육 개혁의 주체

이렇듯 우리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일한 길인 자생적인 학문적 토대의 건설은 단지 교육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특히 경제발전의 문제와 깊이 관련된 시대적 요청이자 당위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활력을 바탕으로 한걸음 전진하는 과정에서 시기의 늦고 빠름이 있겠지만 자생적인 학문적 기반을 구축해 내리라고 확신한다.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그런 과정에서 담당주체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가가 재정적 수요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대학원은 미국식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① 재원조달을 미국과 같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기에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작고, ② 국가주의적 전통이 강하며, ③ 학문후속세대를 전적으로 장학금을 주어 키우는 미국식의 방식에 친숙해 있고, ④ 제도적 저항이 적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학문후속세대를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시키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케 해주는 프랑스식의 형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교

육 구조의 전반을 개혁해야 하는 만큼 제도적 저항이 매우 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주체들 역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대학교육의 개혁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① 국·공립대학은 특수법인화하여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국립대학법 기본예산에 대한 총괄지원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아울러 총장이 인사권을 장악하여 각 대학이 자주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의 교육 및 연구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②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국고보조를 늘리고 국립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및 행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운영에 대한 재단의 불필요하고 부당한 간섭을 크게 견제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재단의 전횡을 보장해주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③ 각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된 상황에서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의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주체들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또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나 조세의 증수를 요청하여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의 민주화운동'은 대학교육개혁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두 주체인 교수와 학생을 배제하고 교육개혁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5. 결 론

그간 우리 대학은 만성적인 초과 수요상태의 교육시장에 안주한 채 소모적인 단순재생산의 교육구조 속에서 새로운 정보와 이론을 주로 외국 대학으로부터 빌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대외의존성을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UR로 말미암아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몇 년 안에 교육시장의 수요/공급 관계가 역전될 상황에서 대학은 활로의 모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학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그 어떤 대학도 UR의 파고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각 대학이 벌이는 자기노력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오직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자생적인 학문의 축적기반을 갖출 때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학문의 종속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자존과 심지어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대학이 그간 양적 팽창을 통해 질적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경제가 그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자생적인 학문세계의 구축은 실현가능한 선택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 선택을 이루겠다는 국민적 결단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개혁은 엄청난 재정수요와 함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대학교육개혁의 성패는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최갑수/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서로 『프랑스 대학명사』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생시몽의 사회사상" 등을 발표했다.